

藝能系 입시는 自律的 管理가 正道다

河 在 恩

(延世大 作曲科)

대학 예능계 입시는 대학이 자율로 관리해서 입학 지망생을 선발하는 것이 正道이다. 그렇다면 대학 예능계 입시의 공동 관리는 편법이 된다. 世上萬事 窳翁之馬라고 절대적으로 좋고 나쁨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대학 예능계 입시의 공동 관리나 자율 관리 어느 한 방법이 절대로 좋고 다른 방법은 절대로 나쁘다는 흑백 논리를 전개하고 싶지도 않지만 또 그리 될 수도 없을 때는 정도를 따름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대학 예능계 입시의 공동 관리(이하 공동 관리라 함)를 시행한 지도 8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니 그 功過를 평가할 때도 되었다고 본다. 그러면 그동안 나타났던 功과 過를 평가해 보자.

공동 관리는 대학 예능계 입시 선발 과정에서 선발 당사자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공정한 선발을 실행해 보겠다는 좋은 뜻에서 출발했다. 아

마 대학 예능계 입시와 관련된 부조리가 많았던 모양이다. 사실 공동 관리란 '예능계'라는 접두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음악계'로 고쳐져야 한다. 예능 계열의 대학 입시 공동 관리라 해 놓고 음악을 제외한 무용과 미술 분야의 대학 입시가 공동 관리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입학 실기 시험의 채점 위원이 모두 외부에서 추천에 의해 선발되어 오니 심사의 대상인 입시생과 하등의 이해 관계가 없어 비교적 공정한 심사를 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 공동 관리의 도덕률이다. 이 이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당초에 의도한 바 그대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가? 결과는 의도한 바와 같이 공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동 관리에서 오는 폐단은 심사위원을 불편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는 불평등의 이중 원칙

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측의 소외감만 조장시킨 결과가 되고 말았다.

공동 관리가 실시되면서 예술 고등학교 학생을 제외한 일반 고등학생이 대학 교수로부터 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타율적으로 박탈 당했다. 민주 사회에서는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 예술 고등학교 학생은 대학 교수의 개인 지도를 받아도 되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은 대학 교수의 개인 지도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론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도 대학 교수의 개인 지도를 받기 원한다면 예술 고등학교 학생에게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것은 민주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비민주적인 처사이다.

예술이란 경험과 경륜에 바탕을 둔다. 경험은 곧 지식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란

자기 경험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정도에 비례한다. 경륜이란 나무의 나이테와 같아서 세월의 풍상을 겪으면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인생을 살찌게 하는 지혜와 자기 표현어법의 成家를 말한다. 그런데 교수의 개인 지도가 금지되어 있어 아직도 이런 경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개인 지도를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예술계의 앞날이 걱정된다. 개인 지도를 교수들에게 허락하지 않으려면 공동 관리를 폐하고 자율 관리에 맡겨 학교 전통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라! 교수의 개인 지도를 양성화하지 않으니 교수가 자기 제자를 시켜 개인 지도를 시키고 교수는 제자의 개인 지도 결과를 평가하는 식의 厩上屋 편법을 쓰기도 한다니 오히려 입시생에게는 이중 부담을 주게 되고 도덕적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경험도 경륜도 없는 사람의 개인 지도를 받고 대학 입시에 실패한 경우를 알고 있다. 학력고사 성적도 좋고 음악성도 갖춘 입시생이 떨어졌다. 알고 보니 작곡에서 과락을 했다. 지시 사항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방향으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방향의 곡을 쓰고 만 것이다. 조사해 보니 대학원생의 지도를 받긴 했으나 경륜의 부족에서 온 무책임한 지도의 결과였다.

공동 관리는 개인 지도를 하고 있는 교수들(금지되어 있으나)에게는 편리한 제도다. 자

율 관리가 되면 자신있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만을 선택해서 책임있게 지도한다. 그러나 공동 관리를 하면 자기가 개인 지도를 한 입시생이 떨어졌어도 그 탓을 공동 관리에 돌려, 별로 심적인 부담없이 자기 정당화를 할 수 있다.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공동 관리는 무익하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학력고사의 성적도 상당히 높아 그 점수면 다른 인기 있는 과에 갈 수도 있었는데도 연주 실력도 자기 학교에서 인정받은 학생이 공동 관리 실시 대학 입시에 낙방을 했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실기 시험 당일 수험생 컨디션 조절에 문제가 있었을 개연성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여러 명의 인정받은 학생이 낙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한 해당 대학 교수들의 견해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심사 위원들이 실기 고사장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사를 걸고 연주하는 수험생의 연주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심사에 임했다는 견해다. 내 학교도 아닌데 누가 입학이 되든 내게 무슨 유익이 올 것이냐 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이다.

둘째는 너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수험생이 너무나 연주를 잘 하기 때문에 대학간에 라이벌 의식을 느낀 심사 위원 교수가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다. 교수가 인격을 모독하는 극언이지만 여하

든 이 두 견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동 관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동 관리를 빌미로 혐담의 대상을 삼은 것이다.

관현악기군의 어느 분야는 해당 악기의 전임 교수가 없어 모두 시간 강사로 공동 관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이 분야는 1~2 명씩만 뽑기 때문에, 또 수험생의 신원이 모두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동 관리를 한다 해도 이해 관계가 걸린 심사위원이 심사를 달게 되는 경우가 있어(시간 강사는 합법적인 개인 지도가 가능하다) 담합이 가능하다. 다른 분야도 담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관악기에 비해 수험생 인원이 많을 뿐 아니라 해당 분야의 교수는 모두 다 대학의 심사위원으로 파견되어 가기 때문에 비교적 담합의 기회가 적다. 공동 관리에서도 담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학에 필요한 학생의 선발이 위면되고 심사위원의 이해 관계가 우선하게 된다면 대학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학생 선발의 기준이 흔들리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동 관리는 부분적인 공동 관리다. 대학에 따라 자율 관리적인 내용과 공동 관리적인 내용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성악 전공에서는 피아노 연주를 입시에 포함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신곡의 시창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는데 이는 자율 심사에 의한 평가를 한다. 작곡 전공에서는 작곡 실기를 치루는 대학이 있고 실기를 치루지 않는

대학이 있다. 시창과 청음을 입시 과목에 포함하는 대학과 포함하지 않는 대학이 있다. 시창과 청음을 입시에 포함해도 평가는 자율 심사로 한다. 그러니까 연주 분야는 자기 전공 악기 연주에 관한 것만이 공동 관리이고 그 이외의 것은 자율 심사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행 공동 관리는 공동 관리도 아니고 자율 관리도 아닌 얼치기 관리가 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작곡의 경우 출제는 해당 대학의 교수가 하고(적게는 2개 과목에서 많으면 5개 과목까지) 채점은 작곡과 화성학의 2개 과목만 공동 심사로 진행한다. 나머지는 몇 과목이 되었든간에 자율 심사이다. 이런 경우 점수 배정 비율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동 관리와 자율 관리의 점수 배정 비율은 비슷하다. 말은 공동 관리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공동 관리를 철저히 지키려면 연주 형태의 심사가 아닌 필답 시험은 학력고사와 마찬가지로 출제—시험—채점 과정이 명실공히 공동 관리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작곡 입시 문제의 출제는 각 대학에서 담당한다. 각 대학의 특성상 일률적으로 학력고사 문제식으로 출제를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고등학교의 평준화와 마찬가지로 대학도 평준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아지기 때문이다. 출제가 자율적이고

시험 과목의 일부 채점이 자율적이려면 구태여 전공 실기(작곡의 경우 화성학 포함)만을 공동 관리로 심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전공 실기의 배점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붙일 수 있겠으나 입학과 낙방의 선이 매우 근소한 점수 차로 결정이 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공동 관리를 당초에 주장했던 사람들이 우려했던 부조리의 여지는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

공동 관리의 실시는 입시 과정에서의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출발된 것이지만 입시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대학의 특성을 제고하여 대학마다의 특징을 살려주는 뜻에서 출발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입시 관리자(대학 교수)를 불신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입시의 부조리는 예능계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만 예능계에서는 교육의 성격상 실기 교육이 일대일의 개인 지도로 행해져 끈끈한 인간적 유대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입시에서의 부조리 유발 가능성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에서 대학 예능 계열 입학에 관련된 부조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미국 사회가 맑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예능 계열 입학에 관련된 잡음이 없는 것은 수요·공급의 시장 경제 원칙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예능 계열 지방생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과 지방생 수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생 수가 적어 교수들을 타 지역에 파견시켜 대학과 대학의 교과과정 및 장학 복지 혜택 등을 고등학생들에게 선전하여 학생 모집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떤가? 공급(지방생)이 수요(대학 정원)를 능가하기 때문에 이들을 다 받아 들일 수 없으니 시험을 보게 되고, 시험에는 꼭 합격해야 하겠는데 경쟁률이 심하니 여러 가지의 부조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유럽 대학 예능 계열에서는 대학 교수의 추천서가 곧 입학 허가서이다. 미국보다 한 술 더 뜨는 제도이다. 적어도 대학 교수의 권위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까지는 못간다 하더라도 교수를 불신하지나 말아야 하겠는데 공동 관리제라는 한국형(?) 입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교원의 수호를 아무리 외쳐 보아야 모두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 아니겠는가?

수요·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입시와 관련된 부조리는 근절되지 않는다. 부조리의 원인 제거를 하려 하지 않고 걸가지만 친다고 해서 부조리가 시정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이 短見이면 교원 수호가 안 된다. 제도적으로 교원 수호가 어려운 형편이라면 아무리 교원 수호를 외쳐 보았자 공염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제도권의 책임이다. 이 불균형이 과열 현상을 만들었고 이와 같은 입시의 과열된 열기와 제도권의 단견 정책 사이에 교수가 개제되어 시달리다 보면 민감한 입시생 부모들의 이목이 교수에게 집중되고 작은 일이 침소봉대되어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물론 일부 무책임한 교수의 비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빈대 몇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모두 태울 수는 없지 않은가? 빈대 몇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 공동 관리라면 더더우기 이 제도는 교권 수호의 차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교수를 믿지 못하겠으면 철저히 불신하라! 그리고 출제에서부터 감독, 채점 등 모든 입시 과정을 전담하여 공동 관리하라! 어느 부분은 자율이고 어느 부분은 공동 관리로

한다면 공동 관리 제도 입안자들은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만다. 믿지 않으려면 철저히 믿지 말고 공동 관리를 해야지 입시의 일부라도 어떻게 믿지 못할 교수에게 자율 관리 시킬 수 있겠는가? 철저히 공동 관리 시킨다고 부조리가 없어지리라고 믿는다면 이 또한 소아병적인 생각이다. 인류 역사 이래 부조리가 완전히 척결되었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했다. 다만 정도의 차이뿐 인간은 부조리와 함께 살아 오고 있다. 그렇다고 부조리 척결에 둔감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부조리는 척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물리적 방법으로는 척결되지 않는다. 물리적 방법은 처음에는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시간이 흐르면 이 억제력을 능가하는 새로운 부조리한 방법이 나온다.

대학 입학생들도 자율 관리와 공동 관리에 대한 의견이

반분된다. 그들 나름대로의 타당한 의견이 있다. 자율 관리를 원하는 학생들은 공동 관리의 공정성에 비교 우위론을 펴면서도 심사 위원들의 무성의한 심사 태도에서 오는 불공정성은 그대로 있으며 공동 관리 심사 위원들에게도 부조리의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학교 발전과 특성 유지에 필요한 학생 선발을 위해서는 자율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공동 관리의 位相 定立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대학 입시의 자율 관리가 正道다. 고등교육 기관의 학생을 선발하는 데 正道를 가지 않고 便法을 쓰고 있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일 뿐 아니라 이 便法을 발동하게끔 동기 유발을 시킨 관련 당사자 모두가 자기 반성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